

“尹의 전면전 선포... ‘검찰 정부’ 무자비한 정치보복”

檢 이재명 전격 소환에 정국 급냉
“중앙정보부 DJ 현해탄 납치 연상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윤정부 성토장 된 광주 현장 최고위
李 “먼지털이 안되니 엉뚱한 꼬투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윤석열 정부의 대야(對野) 도발로 간주하고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특검’까지 언급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권력형 비리의혹도 아닌 ‘공개 발언’의 허위 여부를 문제 삼아 대표 취임 이후 만에 소환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의 의도적 망신 주기가라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윤석열 정부의 대야(對野) 도발로 간주하고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특검’까지 언급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권력형 비리의혹도 아닌 ‘공개 발언’의 허위 여부를 문제 삼아 대표 취임 이후 만에 소환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의 의도적 망신 주기가라는 판단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사흘 만인 8월 30일 대통령과의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이 있는지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납치)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혹에는 무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수사이자 불공정 수사”라고 했다. 또 “검찰 소환은 ‘답정기소’, 정해진 기소 방침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공개 소환은 공개 망신 주기로 과거 정치 공안통 검사에 징계했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수법”이라며 “국민들은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내일 의회에서 정치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므로, 그 점을 감안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이번 소환조사로 불투명해진 것이냐는 물음에는 “저희 입장에서선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대한 답은 저

쪽(윤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민생을 위해서는 여전히 협치에 응할 수 있다는 ‘투 트랙’ 전략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의 현장 최고위원 회의는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한 당 지도부의 집단 성토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동안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며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이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명백해졌다”며 “정치검찰이라는 호위무사를 동원해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먼지털이식 수사를 계속했지만, 몸통의 꼬리도 못 잡고 먼지도 나오지 않으니 결국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그런 어비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진보·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도발”이라고도 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 국민의힘의 내용 등 어수선한 여권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주장도 터져 나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작스러운 출석 요구는 ‘명절 밥상 민심’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의 소환 타이밍도 참 절묘하다. 추석 밥상에 ‘이재명 소환’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검찰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의 시간을 이재명의 시간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의 비이재명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일단 결집해서 대응하는 기조다. 당권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당이 단합하면서 그간 누적이던 계파 갈등이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검찰의 전격적인 소환에 ‘김건희 특검’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 주장에 당분간은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원석 총장 후보 “김건희 여사·한동훈 장관과 사적 인연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3일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공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도 “사적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장관과의 관계에 대해

서는 “사법연수원 동기 이외 사적 관계는 없다”고 한 뒤 ‘한동훈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지적엔 “공직 기관에서 ‘측근’, ‘라인’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이 후보자는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통령 권자 공사 특혜·비선 수행·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등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가 들어왔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일가 친척의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개시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반듯하게 해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검토... “대통령실 이전과 연계”

정부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상황과 연계해 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변경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관저 신축과 영빈관 설치 등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이 순차적으로 반환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는 부지 정비와 리모델링을 병행하며 대(對)국민 임시개방을 확대한다.

4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은

총 303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89억 4000만원)와 비교하면 3.4배 증액된 규모다.

정부는 내년도 용산공원 사업 지원 예산 중 가장 먼저 ‘공원계획 수립’ 항목에 8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공원구역 변경 등 변화요인을 반영해 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국토부 용산공원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여건 변화에 따라 용산공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계획 변경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 누구나 문 정부 잘못도 윤 정부 잘못도 지적할 자유 있다”

대구서 당원·시민 기자회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4일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김광석거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대통령인 당원도 당 대표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내부총질’이라 지적하고 그 모욕적인 내용을 회람할 수도 있다. 그것은 본질에서 동일한 자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며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달라.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혐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이다. 새 세대위 출범을 위한 5일 전국위 개최를 하루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조승천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공개했다가 보수진영에서 파문당한 사례를 거론한 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

다 더 위험하다. 말을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자가 방귀를 끼는 때에 맞춰서 지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라며 자신의 ‘양두구육’ 사자성어 사용을 비판했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직격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양두구육’은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적시한 마당에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다면 사리분별이 안되는 것이고, 호들갑이면 영혼이 없으므로 뺏지를 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24회 서포터즈 보성소리축제

보성소리축제

축제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2022. 9. 30. - 10. 2. 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보성 판소리 성지

접수기간
2022.8.16. 화 ~ 9.23. 목 18:00 까지 도착분

접수방법 본인 및 대리신청, 방문·우편·e-mail·FAX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신분증 지참(대회 당일)
※ 판소리 명창부: 원형 또는 2시간 이상 발표 증명 경력 자료 제출

참가비 없음

접수처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문화원)
·우편 및 방문 (59453)전남 보성군 보성을 송재로 281-11 보성문화원
·e-mail bs2629@hanmail.net ·FAX (061)853-2629

접수안내 (061)850-5892, 852-2629 /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
http://www.boseong.go.kr/tour/festival/sopyonje

주최 보성군 **주관**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전남도의회, 전남남도교육청, 보성문화원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관중 경연대회로 전환될 수 있음.